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과: 경남을 중심으로*

최민석** · 송원근***

이 논문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형성과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지역 환경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경남 사회적경제의 특수성을 함께 밝혀보고자 했다. 전국적으로 본다면 지역의 제조업 의존도가 낮을수록,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지자체의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인구 대비 사업체 수와 시민단체 수가 많을수록 지역 인구 대비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더 많이 설립되고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남은 타 지역에 비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설립, 유지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약할 뿐더러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네트워크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지 못한 데 큰 이유가 있다. 경남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지역 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작용을 수행할 유인이 부족했기에 지자체와의 연계 이외에 다른 조직들과의 연대와 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약한 네트워크와 낮은 성과라는 악순환을 깨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에 의한 기금 조성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어: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과, 지방 거버넌스, 경상남도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3083556).

** 제1저자,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 교신저자,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 서론

칼 폴라니(K. Polanyi)는 이중 운동(double movement)이라는 개념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조정 시장의 확장과 이에 맞선 사회의 자기 보호 운동을 포착하고자 했다(폴라니 2009, 381). 오늘날 대안적 경제 조직이자 실천으로 주목받는 사회적경제 또한 자기조정 시장과 자유방임 자본주의에 의해 위협에 처한 인간, 자연, 생산 조직을 방어하기 위한 분투의 일환으로 태동했다. 사회적경제가 실천과 조직 원리로서 재조명된 계기 또한 1970년대 전 지구적 경제위기 심화와 복지 국가의 과부하,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김신양 2016, 14-15). 사회적경제는 시장 실패가 야기한 문제를 지역 공동체 위기로 규정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기획인 것이다.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평등에 대처하고 사회와 공동체가 원하는 것을 전달할 국가의 역량이 제약되면서(Acemoglu & Robinson 2019) 사회적경제가 세계 각국에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사람과 조직 간 호혜와 협력에 기반을 두고, 공동체의 충족되지 않는 필요를 발견하여 이를 자립적으로 해결하는 영역과 활동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 고유성을 말할 수 있다(이해진 2015, 142). 그러나 사회적경제가 발전하는 양상과 기능하는 방식은 국가마다, 지역마다 상이하다. 사회적경제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로부터 자원을 흡수하면서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 시장, 시민사회 각 부문의 역량, 역사적 경험, 제도적 배치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구체적 모습도 차별성을 보인다(최나래·김의영, 2014; Defourny &

Kim 2011; Kerlin 2010).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의 사회적경제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국가의 주도성이라고 할 수 있다(박준식·안동규 2014; Defourny & Kim 2011). 유럽에서 사회적경제가 불평등과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자발적 운동으로 시작되었다면, 한국에서는 정부 주도의 제도화에 의해 사회적경제가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국가 주도성은 사회적경제가 태동하게 된 맥락과 연관되어 있다. 한국에서 사회적경제를 주목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IMF경제위기 이후 높은 실업률, 고용없는 성장, 소득양극화 심화였다(김희송 2016, 57).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 사회적경제에 주목했다. 특히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자활사업, 2003년 사회적일자리라는 명칭으로 불린 공공근로사업이 제공하는 저임금, 임시직 일자리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김재인 2012, 72-73). 국가는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설과 운영을 지원했다(김혜원 2011).

정부의 지원 체계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동형화를 야기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준영 2014, 36; 이재화·조상미·권소일 2018, 209; 이해진 2015; 최조순 2013). 정부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조직일수록 압력은 가중된다. 반대로 지역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 문제에 천착하려는 시도들도 나타나고 있다(신명호·이아름 2013). 이는 제도적 동형화에 맞서는 지역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해진 2015). 이러한 길항작용을 통해 지역마다 사회적경제의 특색이 다르게 나타난다.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정도도 지역마다 차이를 보인다. 인구 대비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를 놓고 비교해보더라도 지역별 편차가 적지 않다. 지역마다 사회적경제를 통해 해결하려는 문제가 상이할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다르고, 사회적경제에 투입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준다(이해진 2019).

선행 연구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고, 사회적경제 조직 수나 규모 면에서 열악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네트워크 형성도 미약하다(박지영·홍효석 이원기 2014; 송원근·이은선 2020, 19; 최태룡 2018). 낮은 조직화 수준과 약한 네트워크 수준은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저해할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자원 동원을 어렵게 하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민선 7기에 들어서서 경상남도 광역정부가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하고 사회적경제추진단을 신설, 민관협치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이런 노력의 성공 여부는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지역 공동체의 참여 정도에 달린 문제라고 하겠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과를 측정한 선행연구 다수는 정부 지원의 효과에 초점을 두었다(강석민 2014; 고명일·양난주 2019; 김숙연·강수진 2017; 김재홍·이재기 2012; 도수관·박경하 2014; 엄태기·김석은 2021; 최민석 2021; 홍효석·김예경 2016). 선행연구들은 연구의 자료, 기간, 방법론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특히 정부 지원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제적 성과에 주는 영향은 연구에 따라 정반대로 제시되기도 한다. 다만 정부의 인건비 지원과 사회보험료 지원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취약계층 고용 규모를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는 다수의 연구가 일치하고 있다.

이 논문은 사회적경제의 조직화와 경제적·사회적 성과에 지역의 조건들, 특히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둔다. 기존 연구들이 정부 지원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과 간 관계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 연구는 사회적경

제 네트워크를 변수로 삼아 그것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물론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또는 생태계에 주목한 연구들이 없지는 않다(신명호·이아름 2013; 이해진 2019). 그러나 이 연구는 기존 연구들보다 광범위한 자료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이 연구는 경남이라는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경남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연구자의 실천적 관심에 따른 것이다.

이 연구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여러 자료가 활용되었다. 사회적기업 현황 자료, 협동조합 현황 자료는 지역별 사회적경제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 정도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 좌우되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되었다. 또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조직의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0)에서 조사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자원조사 자료[Dataset]”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경남,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전북, 충남, 충북의 사회적경제 조직에 종사하는 주요 운영진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표본수가 5,030개로 충분히 크기에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경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논의

1)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와 생태계

한국에서 사회적경제가 제도화된 초기에 정부 정책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더 많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더 많은 취약계층 일자리를 의미했다. 그러나 한시적 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경제 조직 중 상당수는 존립 위기에 처했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방식도 변화해야 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민관, 민민 네트워크 구축을 모색한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협력을 이끌어 내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생력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이라는 정책 과제로 제시되기도 했다(이은애 2014).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규정된다. 이처럼 사회적경제 생태계라는 개념은 사회적경제의 육성이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정책을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제기되었다(한국협동조합연구소 2019, 18).

구체적으로 본다면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자본금을 모으고, 판로를 확보하며, 경영 기법과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신뢰가 높고 네트워크가 확고히 자리 잡은 지역에서는 행위자들 간의 호혜성을 통해 시장경쟁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상대적으로 쉽게 극복할 수 있다(신명호·이아름 2013).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서 먼저 주목할 것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 관계이다. 사회적경제 당사자들 사이의 네트워크는 사회적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당사자 조직들의 연합 조직, 예를 들면 당사자 조직간 연합회나 협의회 같은 연대조직 네트워크로 구체화된다(CASE 2008). 이러한 네트워크를 포괄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조직들 간에 자원이 실제로 공유될 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자원 공유를 통한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이라는 점에서 보면 지역 수준에서 사회적경제 조직과 당사자 조직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유형의 네트워크가 넓고 깊게 조성된 지역일수록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이 용이하고, 지속가능성도 높아진다.

또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성 확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데(최조순 2012), 지자체는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민관협력의 핵심적인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이다(유현종 정무권 2018). 지자체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의해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이해진 2015, 167). 하지만 민간 조직 간 네트워크가 확고히 조성된 경우에는 지자체 성향과 무관하게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신명호·이아름 2013, 51; 이경마·정원모 2017, 154).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조건들과 네트워크 효과를 다중회귀모형으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협력을 경험하면 할수록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성에 민간네트워크와 당사자조직의 참여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이해진 2019).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이경마·정원모 2017, 138). 지역에 고유한 문제를 포착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공감을 통해서 지역 자원을 동원하고 지역민들의 필요에 부응해가는 것이야말로 사회적경제가 지향해야 할 지역화 전략이다(이해진 2015). 경제적 수익성 또한 지역에 고유한 자원을 동원할 때 더욱 증가할 수 있다(이종호·채민수 2016). 정부 지원에 의존할수록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정부 서비스 대행 기관이나 고용 대행 기관으로 동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며(DiMaggio & Powell 1983), 지역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영세성을 벗어나는 데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지역 주

민들의 다양한 경제적 활동에 의해 생산된 부(富)를 지역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계속 흐르는 경제”(전중근 2017), 즉 지역순환경제 형성을 촉진시키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Jacobs 2000).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특성과 발전 수준은 지역의 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시민사회의 역량이다.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추동하기 위해서는 “필요의 조건”(condition of necessity)과 “공동운명 조건”(condition of shared destiny)이 충족되어야 한다(Defourny & Develtere 1999). 필요의 조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기존 경제체계가 문제로 인식되는 계기가 있어야 하며, 사회적경제가 대안적 선택지로 인지되어 있어야 한다. 실업률 상승, 제조업 위기, 지역 쇠퇴 등의 문제 상황에서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사회적경제를 떠올리게 될 때 필요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다. 사회적경제보다 대기업 유치, 제조업 혁신 등을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여기는 곳에서는 필요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역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경제를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지적·정치적 역량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 필요의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경제 조직이 곧바로 출현하지는 않는다. 스스로를 공동운명체로 간주하는 집단이 존재할 때 그들 주도로 사회적경제 조직이 건설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노력은 공동체 의식과 연대 의식이 강한 지역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이해진 2017). 시민사회 역량이 큰 지역일수록 사회적경제가 산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높게 평가할 것이며,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의 밀도도 높을 것이다.

둘째, 지자체의 의지, 그리고 지자체가 동원가능하고 사용가능한 자원의 내용과 규모이다. 지자체의 지원은 사회적경제가 성숙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특히 중요한 변수가 된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 방향과

지원 수준은 정치적 의지에 좌우될 수 있고(최태룡 2018, 61; Coraggio 2015, 146), 지역사회 민관파트너십의 역사적·제도적 관행에 의해 규정될 수 있으며(Korosec & Berman 2006, 456), 정부가 투입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의 절대적인 수준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다. 또한 지역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은 지방정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유럽의 여러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사회적경제는 쇠퇴하는 지역에서 대안으로 모색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런 곳에서 지방정부의 지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셋째, 시장 및 민간기업 환경도 중요한 변수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 가치를 산출한다는 점에서 일반 영리기업과 구분되지만, 영리 활동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운동 단체나 비영리기구와 차별점을 갖는다(김희송 2016, 67). 영리 조직들은 기업 생태계가 충분히 조성된 곳에서 더욱 많이 설립되고, 안정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경제 조직 또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영리기업들이 밀집된 지역에서 거래 상대를 찾기 쉽고, 투자와 지원을 확보하기 쉬울 것이다. 또한 기업가 활동이 왕성한 곳에서 사회적기업을 창설하려는 시도도 더욱 활발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구양미 2016, 243-244). 영리 활동에 유리한 지역에서 사회적기업가 정신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정리해본다면, 사회적경제는 시민사회의 역량이 높고, 지자체의 지원 의지와 자원 투입이 충분하며, 영리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크가 확고한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신규 설립이 많고, 지속 가능성도 높으며, 사회적 가치 창출도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2) 사회적경제의 혼종성과 유동성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사회적경제가 갖는 혼종성(hybridity)에 있다. 사회적경제는 재분배 원리에 기초한 '국가', 교환 원리에 기초한 '시장', 그리고 상호성의 원리에 기초한 '공동체'가 함께 만나는 영역에 걸쳐있다(Nyssens 2006). 사회적경제는 정부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별개의 영역이나 시장에 대립하는 경제활동이 아니라 정부·시장·공동체가 중첩되고 재분배·교환·상호성의 원리가 유연하게 활용되는 매개적 영역이다(Defourny & Pestoff 2008). 그래서 법이나 조세측면에서 본 공식부문(비공식부문), 경제활동 목적의 영리성(비영리성), 국가와 관계 측면에서 공공부문(민간부문)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사회적경제는 시대별로, 지역별로 그 규모와 역할이 달라진다(Kerlin 2010).

사회적경제의 혼종성은 경제활동의 목적을 돈벌이가 아니라 살림살이와 사회적 필요의 충족에서 찾으며, 경제활동 및 노동분업의 원리를 재분배·호혜·가정경제·교환으로 재구성한 플라니의 작업과 연관성이 깊다. 이 중에서 호혜(reciprocity)는 일정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 사람들 사이에 공동체 유지나 사회적 인정을 목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서로 주고받는 쌍방향의 노동분업이다. 오늘날 시민단체나 자선단체들에 의해 수행되는 증여나 자원봉사 활동들은 이 호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박종현·송원근·이은선 2019, 143). 물론 이 호혜적 활동을 영리 목적의 사업(business)으로 연계해야 하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이윤 추구가 주된 동기인 시장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사회적경제 기업 간 네트워크를 통해 내부거래 시장을 형성하거나(김혜원 2016), 시민단체, 지자체, 민간 기업과의 호혜적 네트워크를 통해 불리함을 보정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의 혼종성은 '어떤' 사회적경제가 바람직한가에 관한 상

이한 입장들로 표현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사회적경제를 취약계층 고용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한정하면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제적 자생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인다(김주환 2017 참조). 학계 내에서도 사회적경제의 시장 성과를 강조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정책 또한 시장 지향성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 사회적경제는 국가의 복지 지출 확대에 예산 제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장 실패를 저비용으로 해결하려는 보완물로 간주된다(안상훈 2016). 반면, 사회적경제 조직의 결사체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공동체 운동으로 사회적경제를 자리매김하려는 급진적 지향 또한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사회적경제는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자,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적 경제 모델인 것이다(이해진 2015).

하지만 사회적경제의 혼종성이 현실적으로 귀결될 방향은 아직 고정되어 있지 않다. 사회적경제의 발전 양상은 이해관계자들의 정치적 역량과 더불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성과들을 산출하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국가와 영리기업으로부터 자립하여 지속가능성을 보이면서, 시민사회로부터 사회적 가치들을 인정받을 때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의 대안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역 시민단체의 역량과도 연관된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시민단체와 결속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낼 때 사회적경제 생태계 또한 지역 공동체에 밀착한 방식으로 조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시민사회와 네트워크가 약한 상태에서 국가에 크게 의존할 경우 사회적경제는 정부의 사회서비스 대행을 넘어서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어렵다. 특히 한국에서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을 대행하는 역할에 고착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취약계층 고용이 갖는 의미를 무시할 수 없으나, 그것에 역할이 한정된다면 사회적경제의 의의는

한층 퇴색된다. 다른 한편 영리기업과의 연계 정도가 지나치게 강하면 사회적경제 조직은 기업의 사회공헌 대행 조직과 유사하게 되거나, 영리기업과 차별성이 없어질 것이다.

사회적경제가 뿌리내리는 과정에는 지방정부의 의식적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Bateman 2015). 하지만 시민사회 풀뿌리 조직과의 네트워크가 강할 때 사회적경제는 연대성이 강화되고, 대안적 조직이자 실천으로서의 의미가 부각될 수 있다(Corragio 2015, 137-139). 또한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의 연계는 그 자체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효과를 갖고 있으며, 높은 사회적 자본은 다시 사회적경제에 우호적인 조건을 만든다(최조순 2012, 143). 각 급 정부와 민간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경제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려면 시민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이 가장 중시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의 사회적경제에 국가 주도성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3. 사회적경제 조직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사회적경제 조직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지역별로 인구 대비 사회적경제 조직 수를 살펴보면 적지 않은 편차가 나타난다. 광역 지자체별로 확인해보면 광주, 울산, 강원, 전북, 전남, 제주에서 인구 대비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이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부산, 대구, 경기, 경남에서는 인구 대비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가 적다. 특히 경남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수 모두 인구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처럼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표 1〉 사회적경제 조직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광역 지방자치단체별)

(단위: 개, %)

지역	인구 10만명당 사회적기업수	인구 10만명당 협동조합수	제조업 종사자 비율	고령인구 비율	재정자 주도	인구 10만명당 시민단체수	인구 1천명당 사업체수
전국	5.62	40.41	18.2	16.4	68.7	29.42	80.55
서울	5.56	46.76	5.1	16.1	77.8	37.46	84.66
부산	4.18	27.83	14.7	19.4	61.0	26.34	85.05
대구	4.28	32.40	18.0	16.6	61.5	20.32	86.52
인천	6.00	20.45	22.4	14.0	66.3	25.71	69.75
광주	8.81	68.93	13.6	14.2	62.4	47.28	84.94
대전	5.39	53.79	10.0	14.4	63.1	43.87	81.11
울산	8.58	32.96	33.2	12.6	67.5	34.76	75.83
세종	6.43	63.91	16.4	9.8	65.2	12.50	52.97
경기	3.92	30.08	24.9	13.2	69.3	19.37	70.57
강원	10.26	76.90	9.3	20.7	73.1	24.71	95.24
충북	7.53	40.83	28.6	18.0	68.8	31.74	83.45
충남	5.39	43.56	30.7	19.1	69.8	21.83	83.18
전북	8.84	74.36	16.3	21.4	66.6	56.13	84.71
전남	8.28	62.33	15.8	23.5	66.7	32.48	86.63
경북	6.84	38.19	27.8	21.7	68.9	32.10	88.83
경남	3.93	29.43	28.9	17.4	65.7	23.84	85.28
제주	10.35	52.05	4.3	15.7	63.1	61.03	98.51

※ 출처: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통계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인증 사회적기업 리스트”(2021. 5. 10 기준), “협동조합 설립현황”(2021. 7월 기준), 시민단체 통계는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2021. 3. 31 기준)을 활용하였으며, 그 외 자료는 KOSIS 통계를 가공.

첫 번째 이유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앞서 언급했던 ‘필요의 조건’과 관련된다. 일자리 부족 등의 위기 상황이 인식되어야 하고, 그 해법으로 사회적경제가 수용되어야 한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지역의 경제적 문제 또한 제조업 일자리를 복원,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조선업 중심 도시인 거제시의 경우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10만명당 사회적기업 수가 적다(0.79개).¹⁾ 그러나

<표 1>의 울산 사례처럼 제조업 중심 지역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회적경제 조직이 적은 것은 아니다. 다른 한편 지역별 고령인구 비율은 지역 산업구조와 고용 기회를 반영하고 있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적으며, 지역 재생 압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 의성군(41.5%)이며, 가장 낮은 곳은 울산 북구(8.2%)이다. 물론 높은 고령인구 비율은 양면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 지역 쇠퇴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사회적경제 지원에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이 증가하는 반면,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시도가 나타날 가능성은 감소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 수의 지역별 편차와 관련해 두 번째로 추론해볼 수 있는 요인은 각 지역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격차다. 한국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초기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투자를 통해 성장해왔음을 감안할 때 지방정부의 재정자주도가 사회적경제를 육성하는 데 제약조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세 번째로 시민사회와 민간 영리기업의 활성화 정도도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결사체의 정치적, 경제적 중요성은 토크빌(A. Tocqueville)로부터 퍼트남(R. D. Putnam)에 이르기까지 여러 연구자들이 강조한 바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시민단체를 포함한 지역 사회 네트워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 영리기업이 많을수록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업 기회 또한 증가할 것이며, 사회적경제를 통해 지역사회를 혁신하려는 사회적기업가 정신 또한 활성화될 수 있다(구양미 2016, 243-244). 사회적경제 생태계 관점에서 본다면 시민단체와 영리 사업체 수가 많을수록 사회적경제 조직이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기에 용이할 것이

1) 강원 양구군, 전남 진도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에는 사회적기업이 하나도 없다. 이들 지역을 제외하면 경남 거제시가 인구 대비 사회적기업 수가 가장 적다.

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총 229개 기초지자체의 인구당 사회적기업 수와 인구당 협동조합 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제조업종사자 비율, 고령인구비율, 재정자주도, 인구당 사업체 수, 인구당 시민단체 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그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기초 지자체의 인구 대비 사회적 기업 수, 협동조합 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

변수	인구 대비 사회적기업 수		인구 대비 협동조합 수	
	기본모델	경남 변수 추가	기본모델	경남 변수 추가
상수	-0.143 (0.156)	-0.161 (0.155)	-26.198** (9.316)	-27.814** (9.149)
전 산업 종사자 중 제조업종사자 비율	-0.003 (0.002)	-0.002 (0.002)	-0.333** (0.126)	-0.287* (0.124)
고령인구비율	0.008* (0.004)	0.009* (0.004)	0.977*** (0.222)	1.084*** (0.221)
재정자주도	0.005+ (0.003)	0.005* (0.003)	0.717*** (0.166)	0.719*** (0.162)
인구 대비 사업체 수	0.004*** (0.001)	0.004*** (0.001)	0.164** (0.056)	0.167** (0.054)
인구 대비 시민단체 수	0.003** (0.001)	0.003** (0.001)	0.325*** (0.068)	0.311*** (0.066)
경남 더미 (경남=1/그 외=0)		-0.225* (0.108)		-20.211** (6.405)
수정된 R2	0.265	0.275	0.429	0.451
F	17.401***	15.436***	35.258***	32.221***

※ +p<0.1, *p<0.05, **p<0.01, ***p<0.001

※※ 자료: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통계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인증 사회적기업 리스트”(2021. 5. 10 기준), “협동조합 설립현황”(2021. 7월 기준), 시민단체 통계는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2021. 3. 31 기준)을 활용하였으며, 그 외 자료는 KOSIS 통계를 가공.

제조업종사자 비율은 사회적기업의 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협동조합의 수에는 부(-)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제조업 중심 도시에서는 사회적경제가 경제적 대안으로서 체감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 고령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모두 증가했다. 고령 인구 중심의 쇠퇴 지역일수록 사회적경제를 통해 활로를 모색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필요의 조건이 제조업 의존도가 낮고, 지역의 쇠퇴 정도가 큰 지역에서 더 많이 충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상했던 것처럼 지역의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지자체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재원이 많을수록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에도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적 여력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발전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인구 대비 사업체 수와 인구 대비 시민단체 수는 모두 사회적경제 조직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 흥미로운 부분은 사회적기업의 경우 시민단체 수보다 사업체 수의 영향력이 더 큰 반면, 협동조합의 경우는 그 반대라는 점이다.²⁾ 두 조직형태 모두 사업체이자 결사체라는 혼종성을 갖고 있지만,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유지에는 영리 사업체로서의 환경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반면, 협동조합의 설립과 유지에는 시민사회의 참여 역량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경상남도에 초점을 맞추어 보자. <표 1>에서 유추할 수 있듯 경남은 높은 제조업 의존도, 낮은 재정자주도, 적은 시민단체 수로 인

²⁾ 인구당 사회적기업 수를 종속변수로 한 모델에서 인구당 시민단체 수의 표준화계수는 0.207, 인구당 사업체 수의 표준화계수는 0.281이다. 반면 인구당 협동조합 수를 종속변수로 한 모델에서는 인구당 시민단체 수의 표준화계수는 0.317, 인구당 사업체 수의 표준화계수는 0.191이다.

해 상대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이 설립되고 유지되기 어려운 조건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남의 낮은 사회적경제 조직 수는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표 2>의 기본모델에 경남 지역을 더미 변수로 추가해 분석하면,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에도 경남에 소속되어 있는 지자체들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타 지역에 비해 적게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경남에 소속된 기초지자체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인구 10만명당 사회적기업이 0.225개 적게 나타나며, 인구 10만명당 협동조합은 20.211개 적게 나타난다. 이는 경남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유지를 저해하는 별개의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선행 연구들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언급할 것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역대 도지사들의 무관심이다. 민선 7기 이전까지 경남도지사들은 사회적경제 육성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었고, 대규모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강화하고자 했다(최태룡 2018, 61).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광역지자체의 의사결정이 크게 반영된다는 점에서 이는 적지 않은 차이를 만들어냈을 것으로 보인다(김희송 2012, 126).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 수준 또한 매우 저조하다(박지영 외 2014, 75). 여기에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만들어 낸 관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민사회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경남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전 상태뿐 아니라 시민단체의 역량도 전국에서 가장 취약하다. 인구 대비 시민단체가 수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조직들의 지속가능성 또한 열약하다(김정희 2016).

사회적경제에 대한 도지사의 성향도 중요하겠으나 전반적으로 경상남도에는 사회적경제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을 비롯한 시민사회 제반 조직들 간의 상호작용도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0)이 수행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자원조사 자료” 중 지역 내 타 기관과의 연계 정도를 묻는 설문에 대한 응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3>은 경남, 수도권, 그 외 지역으로 분류하여 각 응답에 대한 일원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다.

〈표 3〉 지역 내 타 기관과의 연계 정도에 관한 일원분산분석 결과
(평균값 및 표준편차)

	경상남도	수도권	기타 지역	F값
표본수	327	1861	2842	
지자체	5.94(2.895)	5.79(2.969)	5.63(2.841)	2.681+
지역 시민단체	5.02(2.842)	5.32(2.854)	5.16(2.731)	2.510+
지역 공공기업	3.68(2.760)	4.06(2.935)	4.08(2.709)	3.064*
지역 민간기업	4.31(2.897)	4.99(2.921)	4.82(2.740)	8.646***

※ +p<0.1, *p<0.05, ***p<0.001

※※ 최소 0점, 최대 10점 리커트 척도

※※※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자원조사 자료.”

경남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타 지역의 조직들에 비해 지방정부와의 연계는 강하다고 여기는 반면, 지역 시민단체, 지역 공공기업, 지역 민간기업과의 연계는 모두 약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경남의 사회적경제가 지방정부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상대적으로 저조한 민간 네트워크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또한 경남은 사회적경제 기금 등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원 동원 역량도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하다. 같은 자료에서 사회적경제 기금의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한 평가항목에 대한 응답을 일원분산분석한 결과인 <표 4>에 따르

면, 경남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타 지역 조직들에 비해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자본 동원 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경남은 상대적으로 지자체와의 관계를 제외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고, 네트워크를 통한 자원동원도 타 지역에 비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4〉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및 활용도 평가

(평균값 및 표준편차)

	경상남도	수도권	기타 지역	F값
표본수	327	1861	2842	
지역 기금 활용 가능성	2.88 (1.018)	3.03 (0.974)	3.04 (0.906)	4.674*

※ * $p < 0.05$

※※ 최소 1점, 최대 5점 리커트 척도

※※※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자원조사 자료."

4.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과

다음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자원조사 자료"를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과 타 기관과의 관계 정도가 조직의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자. 사회적경제 조직의 혼종성을 감안해 성과는 경제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경제적 성과를 대리하는 변수는 매출 규모와 영업이익(손실)이다. 사회적 성과의 종속변수는 각 사회적경제 조직에 고용된 취약계층노동자 수와 응답자

가 주관적으로 판단한 소속 조직의 사회적 성과이다. 주관적으로 판단한 사회적 성과의 정도는 총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에 대한 응답값을 합하여 구성했다(크론바하 알파=0.874).³⁾ 각 종속변수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종속변수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결과

	(평균값 및 표준편차)			
	경상남도	수도권	기타 지역	F값
매출 규모	1.70 (1.056)	2.11 (1.317)	2.12 (1.394)	11.486***
영업이익 규모	5.87 (0.810)	6.01 (1.101)	6.22 (1.155)	23.927***
취약계층근로자 규모	1.58 (1.026)	1.57 (1.000)	1.46 (0.887)	6.838**
조직의 사회적 기여도	21.55 (5.480)	21.93 (5.068)	22.04 (5.052)	1.438

※ **p<0.01, ***p<0.001

※※ 매출액 코딩은 1억원 미만=1, 1억원~5억원=2, 5억원~10억원=3, 10억원~50억원=4, 50억원 이상=5

※※※ 영업이익(손실) 코딩은 -50억원 이상=1, -10억원~-50억=2, -5억원~-10억원=3, -1억원~-5억원=4, -1억원~0원=5, 0~1억원=6, 1억원~5억원=7, 5억원~10억원=8, 10억원~50억원=9, 50억원 이상=10

※※※※ 취약계층근로자수 코딩은 1명 이하=1, 2~4명=2, 5~9명=3, 10~49명=4, 50~99명=5, 100명 이상=6

※※※※※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자원조사 자료.” 코딩은 연구자가 변환한 것이 아니라 원자료 그대로임.

자료에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결측치가 있는 경우도 적지 않기에 비교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다. 특히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조직일수록

3)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조직은 1. 제공하는 서비스 중 사회서비스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2. 지역 창업활동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편이다. 3. 지역소득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편이다. 4. 지역사회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편이다. 5.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편이다. 6. 지역사회 빈곤을 감소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편이다. 7.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확산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편이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졌다.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응답을 기피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대략적인 양상은 확인해 볼 수 있다. 자료에서 경남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매출규모와 영업이익 규모에서 타 지역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 경남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취약계층 고용 규모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다. 주관적으로 평가한 사회적 기여도는 평균값으로는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전반적으로 경남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상대적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 지원과 연계된 취약계층 고용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제적·사회적 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여기서는 회귀분석을 통해 이를 확인해볼 것이다. 회귀분석에 사용할 통제변수로는 총자산 규모, 업력(業歷), 조직 유형(협동조합=0, 사회적기업=1)을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는 각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역 내 타 기관과의 연계도 및 지역 기금 활용도에 대한 평가를 각각 설정하였고, 여타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 수행 경험 여부와 협의체 또는 연합체 가입 여부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다른 한편, 같은 자료에서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분리하여 동일한 변수들로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경남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보이는 특수성을 확인하고, 향후 경남에서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해 어떤 부분에 치중해야 하는지 정책적 함의를 밝히고자 했다.

1)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와 경제적 성과

여기서는 먼저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네트워크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경제적 성과를 종속변수로 회귀분석한 결

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와 경제적 성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매출액		영업이익	
	전체	경남	전체	경남
(상수)	0.444*** (0.062)	0.263 (0.192)	5.412*** (0.050)	5.831*** (0.224)
총자산	0.650*** (0.015)	0.722*** (0.049)	0.206*** (0.016)	-0.350*** (0.059)
업력	0.004* (0.002)	0.029* (0.014)	0.022*** (0.002)	0.054** (0.017)
조직 유형	0.244*** (0.034)	0.010 (0.110)	-0.204*** (0.037)	0.101 (0.130)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업 경험 여부	0.089* (0.036)	0.133 (0.119)	0.048 (0.039)	-0.101 (0.137)
협업체 가입 여부	0.105** (0.035)	0.113 (0.116)	-0.144*** (0.038)	0.194 (0.135)
지자체 연계 정도	0.021** (0.007)	0.006 (0.022)	0.012 (0.007)	0.135 (0.025)
시민단체 연계 정도	-0.015* (0.007)	0.016 (0.023)	0.019* (0.008)	-0.011 (0.027)
공공기업 연계 정도	0.017* (0.007)	0.019 (0.026)	0.006 (0.008)	-0.003 (0.030)
민간기업 연계 정도	0.006 (0.007)	0.005 (0.024)	-0.031*** (0.008)	0.006 (0.028)
지역 기금 활용 가능성	-0.018 (0.017)	-0.062 (0.056)	0.033+ (0.019)	0.062 (0.067)
수정된 R2	0.553	0.599	0.275	0.126
F	451.240***	32.506***	141.254***	3.998***
표본수	3641	212	3694	209

※ +p<0.1, *p<0.05, **p<0.01, ***p<0.001

※※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자원조사 자료."

먼저 통제변수들을 확인해보면, 사회적경제 조직의 총자산이 많고 업력이 길수록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다. 이는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이

다. 조직 유형별로 보면 사회적기업이 협동조합에 비해 매출액은 높으나, 영업이익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보다 경제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네트워크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업을 경험한 조직은 그렇지 못한 조직에 비해 더 높은 매출액을 보였으나, 협업 경험 여부가 영업이익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협의회 및 연합체에 가입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가입하지 않은 조직들에 비해 매출액이 더 높지만, 영업이익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영리 창출에서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연대체를 구성, 활용하고 있지만, 사업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데는 도움을 얻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연계 정도가 높다고 평가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매출액은 높지만, 영업이익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자체의 지원은 더 많은 고용을 유발하고, 우선 구매를 통해 판로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조직의 매출 규모를 증대시키지만, 그것이 수익성을 높이는 데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지자체의 지원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외형을 키우는 데만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 시민단체와의 네트워크는 경제적 성과에 양면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와 연계 정도가 높은 조직들이 매출액은 낮게 나타나지만, 영업이익은 높다. 원주 협동조합 운동에 대한 신명호·이아름(2013)을 참조해 말한다면,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공공성 있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사업 규모 확장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반면, 시민단체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경제적 내실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 공공기업과의 강한 네트워크는 매출액을 증대시키지만, 영업이익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등 공기업의 정책적 지원이 매출 확대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나, 조직 영세성을 개선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지 못하다.

지역 민간기업과 연계 정도는 매출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영업 이익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민간기업 연계 정도를 높게 평가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민간기업의 후원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대규모의 민간기업 지원을 받는 조직들은 사업의 수익성에 구애받지 않고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는 기업 후원금을 많이 받는 사회적기업들이 더 낮은 경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힌 선행연구들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다(최민석 2021; 홍효석·김예경 2016)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서 조성한 자본에 접근성이 높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더 높은 영업이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수단은 대단히 제한적이다. 특히 사회적경제의 발전 정도에 비해 사회적 금융의 발전 속도는 매우 더디다(최조순·강현철 2015, 317). 지역에서 기금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수단을 조성할 때 조직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하겠다.

경상남도 표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전체 표본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경남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경우 총자산이 많을수록 매출액이 높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낮다. 이는 경남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다른 지역 조직들에 비해 영세성을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른 한편 전체 표본과 마찬가지로 업력이 오래된 조직들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높다. 경남에서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간 조직 유형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른 한편 경남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네트워크는 경제적 성과와 무관했다. 따라서 지자체를 제외한 다른 조직과의 네트워크 자체가 약

할 뿐더러,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할 경제적 유인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가 지역 네트워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수단에 대한 평가도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정리하자면 경남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사업 환경이 좋지 못하며, 네트워크를 통해 자원을 흡수하고 판로를 확보하는 등의 활동이 원활히 수행되고 있지 않다. 최근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지자체의 문제의식이 높아지면서 포괄적인 정책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송원근·이은선 2020). 타 지역에 비해 취약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조직 간 협업이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을 창출하는데 주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경제적 유인이 없는 상태에서 지자체 주도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이 시도될 경우, 의도와는 달리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부의존성 강화와 동형화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준영 2014, 48). 다른 한편 지자체는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조성하는 데 적극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자원이 실제로 활용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성과가 개선될 때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효용을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와 사회적 성과

여기서는 경제적 성과 분석에 사용한 독립변수들을 그대로 이용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적 성과에 대한 영향력을 측정할 것이다. 여기서 사회적 성과는 취약계층노동자 수와 사회적경제 조직별로 자기 평가된 사회적 기여도이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와 사회적 성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취약계층 근로자 수		조직의 사회적 기여도	
	전체	경남	전체	경남
(상수)	1.027*** (0.058)	0.391 (0.264)	15.207*** (0.286)	14.464*** (1.223)
총자산	0.148*** (0.014)	0.277*** (0.068)	0.342*** (0.067)	1.038** (0.320)
업력	-0.012*** (0.001)	0.011 (0.019)	-0.014* (0.007)	-0.068 (0.089)
조직 유형	0.690*** (0.032)	0.453** (0.152)	0.706*** (0.160)	-0.951 (0.716)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업 경험 여부	-0.056+ (0.033)	0.041 (0.161)	1.091*** (0.166)	1.060 (0.759)
협업체 가입 여부	0.224*** (0.033)	0.354* (0.160)	0.702*** (0.163)	1.213 (0.751)
지자체 연계 정도	0.025*** (0.006)	0.003 (0.030)	0.215*** (0.032)	0.275+ (0.140)
시민단체 연계 정도	-0.017* (0.007)	0.051 (0.032)	0.250*** (0.033)	0.207 (0.148)
공공기업 연계 정도	0.031*** (0.007)	-0.056 (0.036)	0.146*** (0.033)	0.061 (0.168)
민간기업 연계 정도	-0.016* (0.007)	0.055+ (0.032)	0.126*** (0.033)	0.223 (0.152)
지역 기금 활용 가능성	-0.025 (0.016)	0.027 (0.078)	0.429*** (0.080)	0.351 (0.365)
수정된 R2	0.185	0.228	0.205	0.229
F	85.958***	7.502***	95.859***	7.565***
표본수	3782	221	3789	222

※ +p<0.1, *p<0.05, **p<0.01, ***p<0.001

※ ※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자원조사 자료."

먼저 취약계층 근로자 수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부터 살펴 보자. 자산 규모가 클수록, 업력이 짧을수록 취약계층 고용인원이 많으며, 사회적기업이 협동조합에 비해 취약계층을 더 많이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가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인증 사회적기업들은 3년간 취약계층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취약계층 고용에 따른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인증 받은 지 얼마 안 된 사회적기업에서 취약계층 고용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뒤집어 보면, 정부 지원이 중단되는 시점에서 취약계층 고용이 지속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업을 경험한 조직에서는 취약계층 고용이 더 적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협의체 또는 연합체에 가입한 조직들에서는 취약계층이 더 많이 고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반된 결과를 두고 일관성 있는 해석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다만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상설적 관계를 맺고 있는 조직들이 지역사회 취약계층 고용에 더 적극적이라는 점은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흥미로운 부분은 공공조직인 지자체 및 지역 공공기업과 네트워크가 강하다고 응답한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취약계층 근로자 수가 많은 반면, 민간조직인 지역 시민단체, 지역 민간기업과 강한 연계를 갖는 조직에서는 취약계층 고용이 적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이 정부와 공기업의 정책적 지원과 크게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꾸로 말하면 공공기관의 지원이 미약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에서는 취약계층 고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립적이면서 민간 조직들과의 네트워크가 강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취약계층 고용에 적극적이지 않다. 이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정책이 민간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에만 초점

을 맞출 경우 취약계층 고용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 중 하나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 취약계층 고용 문제는 민간의 자율성에 맡길 수 없다.

경남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업력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자산 규모가 큰 경우 취약계층 근로자 수가 많다는 점은 전국과 동일했다. 사회적기업이 협동조합에 비해 취약계층 고용에 적극적이라는 점도 마찬가지이며, 협의체 가입 조직에서 취약계층이 더욱 많이 고용되고 있다는 것도 동일하다. 하지만 경남에서는 지자체, 지역 시민사회, 지역 공공기업과의 연계 정도가 취약계층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유일하게 영향력을 가진 변수는 지역 민간기업과의 네트워크였다. 민간기업과의 연계 정도가 큰 경우 취약계층 근로자 수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전체 표본과는 반대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경남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취약계층 고용이 공공기관과의 연계 정도와 무관한 방식으로 나타나며, 오히려 민간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조직에서 더 많은 취약계층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취약계층 고용과 관련하여 선부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이후 추세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경남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네트워크가 취약계층 고용과 대체로 무관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정도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남에서는 취약계층 고용에 대한 공공기관의 역할이 분명치 않게 평가되고 있다. 취약계층 고용을 민간에 방임하기 어렵다면 취약계층 고용에 관해 지자체와 공기업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사회적경제 주체들에게 이를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검토할 것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 주체들이 평가한 자기 조직의 사회적 기여도이다. 이는 조직 운영 주체들이 느끼는 '공적 자부심'을 계량화한 수치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전체 표본을

회귀분석한 결과에서 통제 변수들을 보면 자산 규모가 크고, 업력이 짧을수록 사회적 기여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조직 유형별로는 사회적 기업 종사자들의 자부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갖는 모든 네트워크는 유의미하게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방면에 네트워크를 갖고 사회적경제 조직을 운영하는 주체들일수록 자기 조직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깊고 넓게 네트워크를 갖고 활동하는 조직의 구성원들일수록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강하게 갖고 있다. 활동에서 얻는 '보람'이 큰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더 높은 사회적 성과가 산출된다는 연구 결과(박미경·최송식·이창희 2012)를 참고해본다면, 조직의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구성원들의 평가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서 조성한 기금에 접근성이 높은 조직들이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자원과 네트워크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일수록 호혜와 협력을 통해 얻는 효능감(efficacy)도 더 크다고 하겠다. 이런 조직들이 많을수록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도 증가할 것이다.

경남의 표본을 회귀분석한 결과를 살펴보자. 자산규모가 클수록 사회적 기여도가 높다고 본 점은 전체 표본과 동일하다. 그러나 업력과 조직 유형은 영향을 주지 않았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네트워크 중 지자체와 연계 정도가 높은 조직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외에 어떤 변수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경남의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타 조직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서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떤 성취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민관 관계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효능감이 있을 뿐, 그 외의 영역에서 연대와 협업에 따르는 효능감을 거의 경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네트워크가 약할 뿐 아니라 존재하는 네트워크도 조직의 성과로 잘 연결되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조직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참여해야 할 유인이 많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경남에서 사회적경제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성과들을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악순환을 깨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다. 또한 사회적경제가 취약계층 고용 수단으로 국한되지 않도록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지자체를 비롯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사회적경제의 '사회성'을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역성과 연대성이 중심이 될 때 사회적경제의 사회적·경제적 가치 창출 또한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이 논문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형성과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경상남도 사회적경제의 특수성을 함께 검토하였다. 먼저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에 영향을 주는 지역적 조건들로서 지역의 제조업 의존도가 낮을수록,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인구 대비 사업체 수와 시민단체 수가 많을수록 지역 인구 대비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더 많이 설립되고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상남도에서는 이상의 변

수로 설명되지 않는 요인이 별개로 작동하고 있었다. 경남에서는 지방 자치단체장의 성향,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 시민들의 낮은 인식, 상대적으로 약한 시민사회 등의 요소가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를 감소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연구를 통해 경남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타 조직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도 중요한 원인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남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지자체와의 연계는 강하게 갖고 있는 반면, 지역 시민단체, 지역 공공기관, 지역 민간기업과의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경남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타 조직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성취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수행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조건에서 직접적 지원자인 지자체와의 연계만 중시되고, 그 외의 네트워크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던 것이다.

경남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지자체로부터 자립적·자율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협업을 통해 네트워크 형성에 따르는 효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우선적인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지역사회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자체 이외의 네트워크가 사회적경제 조직의 실제 이익으로 귀결되는 사례를 만들어 내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사회적경제 조직 전반과 경남 사회적경제의 실태를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는 점을 확인했

다. 반대로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자원을 충분히 흡수하기 어려운 여건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성과와 자부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그 결과 사회적경제가 사회적 자본 축적에 기여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이 연구는 자료의 한계와 변수 설정의 문제로 인해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으며,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예를 들어 시민사회의 역량과 시민단체 수는 반드시 비례한다고 볼 수 없으며, 지역 경제 여건이 사업체 수에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다. 재정자주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사회적경제에 대한 투자가 높은지는 지자체별 예산 분석을 통해 확인해보아야 할 문제다. 게다가 원자료에서 매출액, 영업이익, 취약계층 근로자 규모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과와 관련한 코딩이 서열변수로 설정되어 있어 분석의 정확성과 엄밀성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 단면적으로 측정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효과는 향후 추세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료와 연구방법의 한계에 따른 문제들은 추가적 실증 분석과 사회적경제 조직 운영 주체들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보완되고 더 분명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2021년 8월 21일 접수, 11월 3일 심사완료, 11월 12일 게재확정)

참고문헌

- 강석민. 2014. “정부지원이 사회적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사회적기업연구』 . 7(2). 3-19.
- 고명일·양난주. 2019. “재정지원은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높이는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의 효과 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 21(3). 49-73.
- 구양미. 2016. “사회적경제와 지리학적 사고.” 『사회적경제의 혼종성과 다양성』 . 푸른길. 231-251.
- 김숙연·강수진. 2017. “사회적기업 성과와 정부지원금과의 관련성.”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7(2). 1-19.
- 김신양. 2016.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관점.” 『한국 사회적경제의 역사: 이론의 모색과 경험의 성찰』 . 한울 아카데미. 9-48.
- 김재인. 2012. “지방정부의 사회적기업 성장모델 탐색: 제주지역 사회적기업 운영실태분석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 16(1). 67-88.
- 김재홍·이재기. 2012.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성과분석: 정부지원금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 24(4). 1037-1063.
- 김정희. 2016. “부산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역량과 조건 연구: 시민행동지수(CAI)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 『신학과 사회』 . 30(1). 149-190.
- 김주환. 2017. 『포획된 저항: 신자유주의와 통치성, 헤게모니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정치학』 . 이매진.
- 김혜원. 2016.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과제: 사회적기업 법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대화 기초 발제문. 8월.
- 김혜원. 2011. “한국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개선 방안 연구: 일자리

- 창출 중심의 지원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 18(1). 209-238.
- 김희승. 2016. “사회적경제 연구의 동향과 쟁점: 2001-2015년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 16(1). 51-87.
- 도수관·박경하. 2014.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고용창출간의 관계 분석: 2007-2011년 인증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 48(3). 499-524.
- 라준영. 2014. “사회적 기업 생태계와 정책 혁신: 진화론적 관점.” 『한국협동조합연구』 . 32(3). 27-57.
- 박미경·최송식·이창희. 2012.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요인에 대한 연구: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 51(1). 191-210.
- 박종현·송원근·이은선. 2019. 『사회적경제 표준교육안 개발 보고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박준식·안동규. 2014. “사회적 기업의 발전 경로 비교: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학』 . 15(2). 33-57.
- 박지영·홍효석·이원기. 2014. “사회적 기업의 인식 제고에 관한 연구: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연구』 . 37(3). 57-80.
- 송원근·이은선. 2020. “사회적경제 생태계 분석: 경남의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 33(1). 11-32.
- 신명호·이아름. 2013. “원주 지역 협동조합의 생성과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본 네트워크의 효용.” 『정신문화연구』 . 36(4). 31-58.
- 안상훈. 2016.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과 사회적경제의 역할.” 『사회적경제의 혼종성과 다양성』 . 푸른길. 139-162.
- 엄태기·김석은. 2021. “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체계가 사회적기업의

- 경제적·사회적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행정학보』 . 55(1). 93-120.
- 유현중·정무권. 2018. “한국 사회적경제 거버넌스와 지역발전.” 『지역발전연구』 . 27(2). 33-82.
- 이경미·정원모. 2017. “서울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유형 및 특성 연구: 퍼지셋 이상형 분석의 응용.” 『사회복지정책』 . 44(1). 135-160.
- 이은애. 2014. “서울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의 평가와 과제.” 『월간 자치발전』 . 2014년 4월호. 44-51.
- 이재희·조상미·권소일. 2018.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연구동향 분석: 2000년-2017년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연구』 . 11(2). 183-236.
- 이종호·채민수. 2016. “지역자원 활용형 사회적기업의 지역연계성과 존립기반: 경남지역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22(3). 499-514.
- 이해진. 2019.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협력 네트워크 조직의 관계: 중앙정부, 지자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 9(1). 57-89.
- 이해진. 2017.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 시민사회의 조건 탐색: 춘천시에서 누가 사회적경제를 지지하는가?.” 『지역사회학』 . 18(3). 31-68.
- 이해진. 2015. “한국의 사회적경제: 제도화의 정치과정과 지역화 전략.” 『지역사회학』 . 16(1). 135-180.
- 전대욱. 2018. “지역사회 발전기제로서의 사회혁신과 지역정책 추진방안.” 『자치분권 시대의 사회혁신과 중앙-지방의 협력방안』 , 정책기획위원회 제3차 정책세미나 자료집. 7월.

- 전중근. 2017. 『지역의 변영과 시민경제』. CESE Textbook Series 2016-1. 경남과기대 출판부.
- 최나래·김의영. 2014.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사회적 기업: 영국과 스웨덴 비교연구.” 『평화연구』 . 22(1). 309-343.
- 최민석. 2021. “지방정부와 사회적기업의 성과.” 『창원의 청년과 노동의 위기, 그리고 혁신』 . 2021년도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산업도시연구사업단 제2차 학술대회 자료집. 6월.
- 최조순·강현철. 2015.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사업의 진화론적 접근.” 『한국자치행정학보』 . 29(3). 305-322.
- 최조순. 2013. “지역일자리 창출 정책의 제도적 동형화에 관한 연구: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정책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 11(1). 3-32.
- 최조순. 2012.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지방정부의 역할.” 『시민사회와 NGO』 . 10(2). 117-148.
- 최태룡. 2018.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가치: 경상남도에서의 활동에 주목하면서.” 『지역사회학』 . 19(3). 49-80.
- 폴라니, 칼, 홍기빈 옮김. 2009. 『거대한 전환: 우리 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 . 도서출판 길.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2019. 『지역조사 및 사회적경제생태계 분석 연구』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한신갑. 2016. “협동조합의 조직생태학: 혼종성의 공간, 혼종성의 시간.” 『한국사회학』 . 50(2). 165-198.
- 홍효석·김예경. 2016.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경제적 성과에 관한 연구.” 『재무와회계정보저널』 . 16(1). 1-29.
- Acemoglu, D. and Robinson, J. A. 2019. *The Narrow Corridor: States, Societies, and the Fate of Liberty*. Penguin Press.

- Bateman, M. 2015. "Rebuilding Solidarity-driven Economies after Neoliberalism: the Role of Cooperatives and Local Developmental States in Latin America." in P. Utting (eds.).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beyond the Fringe*. Zed Books. 150-165.
- CASE. 2008. *Developing the Field of Social Entrepreneurship*. Duke University The Fuqua School of Business.
- Coraggio, J. L. 2015. "Institutionalising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in Latin America." in P. Utting(eds.).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beyond the Fringe*. Zed Books. 130-149.
- Defourny, J. and Develtere, P. 1999. "The Social Economy: The Worldwide Making of a Third Sector."
chrome-extension://efaidnbmninnibpcajpcglclefindmkaj/viewer.html?pdfurl=https%3A%2F%2Femes.net%2Fcontent%2Fuploads%2Fpublications%2FDefourny.Develtere_SE_NorthSouth_Chap1_EN.pdf&clen=419215&chunk=true (검색일: 2021. 8. 20)
- Defourny, J. and Pestoff, V. 2008. "Images and Concepts of the Third Sector in Europe." *EMES Working Papers*. 08/02.
- Defourny, J. and Kim, S. Y. 2011. "Emerging Models of Social Enterprise in Eastern Asia: a Cross-country Analysis." *Social Enterprise Journal*. 7(1). 86-111.
- DiMaggio, P. J. and Powell, W. W. 1983. "The Iron Cage Revisited: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Collective Rationality in Organizational Fiel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147-160.
- Jacobs, J. 1992. *Systems of Survival: A Dialogue on the Moral Foundations of Commerce and Politics*. Vintage Books.
- Kerlin, J. A. 2010.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Global Emergence

- of Social Enterprise.” *Voluntas*. 21. 162-179.
- Korosec, R. L. and Berman, E. M. 2006. “Municipal Support for Social Entrepreneurship.”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6(3). 448-462.
- Nyssens, M. 2006. *Social Enterprise: At the Crossroads of Market, Public Policies and Civil Society*. Routledge.
- 인증 사회적기업 리스트(<https://www.socialenterprise.or.kr/>).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자
원조사 자료[Dataset].”
- 협동조합 현황(<https://www.socialenterprise.or.kr/>).
- KOSIS 통계 데이터(<https://kosis.kr/>).

The Influence of Social Economy Network on the Performance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Focusing on
Gyeongsangnamdo

Choi, Min Seok · Song, Won Keun***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the local network on the establishment and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SEOs), mainly focusing on the low performance of SEOs in Gyeongsangnamdo. The analysis of national data shows that the more civic groups and enterprises exist, the higher the number of SEOs per capita. It means that a more complex local network enhances the performance of SEOs. A weak social economy network has forced SEOs to depend on local government rather than other sectors for survival in Gyeongsangnamdo. It was the leading cause of the relatively subpar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s of SEOs that the practice of solidarity and cooperation has been rare in that province. Enlarged local governance consisting of more interest groups is necessary to take root social economy in the local area.

key words: social economy network, performance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 local governance, Gyeongsangnamdo

*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